

## 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부문 성과 브리핑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6~7년 내에 선진국 수준의 첨단환경기술을 개발해 국내 환경질 개선은 물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곽 장관은 참여정부 2주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기준과 국제환경규제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선진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장관은 특히 “우리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경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처리 선진화 및 무·저공해 자동차 개발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남아 지역과 중국 등이 우리의 환경기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특히 싱가포르가 우리가 개발한 천연가스 버스를 유럽 제품의 반값에 도입할 수 있다는 이점에 매력을 느껴 협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중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전가치가 큰 자산을 매입해 영구히 보전하도록 하는 ‘국민신탁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신탁 및 기부자에 대해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 특례 부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 자연경관법정보전지역안의 개발사업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검토하는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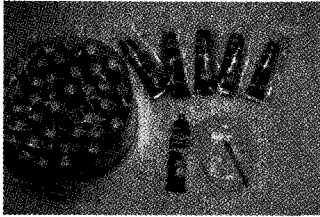
한편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중에는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아 의무감축에서 제외됐지만, 제2차 공약기간 협상 과정에서는 가입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매 3년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장관은 참여정부 2년간의 성과와 관련, “이전의 사후 저감정책에서 사전 예방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라며 “국토환경보전정책 기능강화, 환경보건정책 도입, 모든 폐기물의 자원화, 환경산업육성과 해외수출,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참여 등이 주요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반도의 꿩줄과 같은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관련법률을 제정해 금년 1월부터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금년 2월부터 멸종위기종을 확대지정하고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장관은 “환경부 소관의 고유 환경정책 뿐 아니라 국토개발, 에너지산업부문, 교통과 수송부문, 생산과 소비부문, 세계와 금융부문 등에 환경친화적 개념과 의지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환경정책의 품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유해물질 든 어린이용품 발 못붙여



앞으로 유해물질이 든 어린이용 용품이나 장난감 등은 생산과 수입, 판매

에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산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유통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대롱에 묻혀 부는 칼라풍선(일명, 본드풍선)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초산에틸이 검출되어 어린이 유해용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졌으나, 이런 유행성 장난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생산, 수입, 판매를 규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문제가 된 칼라풍선을 환각물질로 관리하는 한편, 올 상반기중에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가 우려되는 용품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유해한 어린이 용품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 장난감 등의 실태조사를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유해우려 품목은 목록을 작성해 지자체나 교육청에 통보하는 등 불량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는 자발적 협약 확대



화학물질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기업체간 자발적 협약 체결이 더욱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시

범협약을 체결했던 9개 업체 17개 사업장을 포함해 앞으로 100여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협약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업무 특성에 따라 저감할 물질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다량배출물질이나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우선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협약기간

(‘04~’09)동안 시설개선을 위해 2,154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50%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 기업체에는 지도단속면제, 환경친화기업 지정 평가시 가점부여, 방지시설 설치자금 우선 융자, 저감우수업체 정부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자발적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3월말까지 참여의향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시,도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협약기업의 배출저감 개선노력과 이행실적은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평가단이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하게 된다. 